

2015. 08

충청남도의회소식 제68호

제279회 정례회 · 제280회 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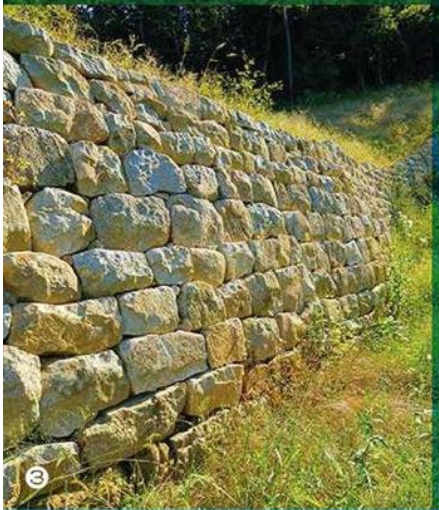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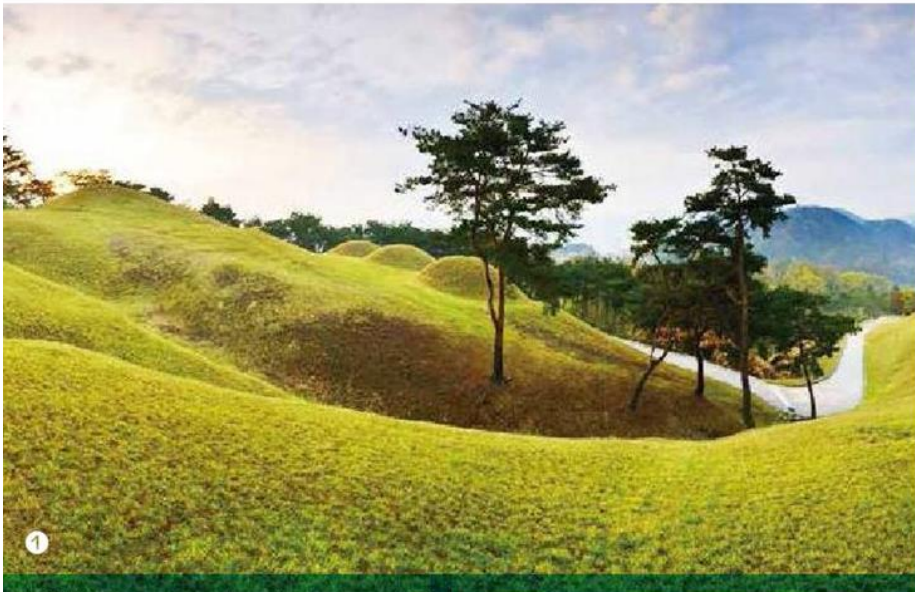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나가는
**충청남도
의회소식**



세계유산
백제역사
유적지구



公州



충남지역의 세계유산

공주 ① 송산리고분군 | 공주시 금성동에 위치한 무령왕릉을 비롯한 웅진시대 백제왕실능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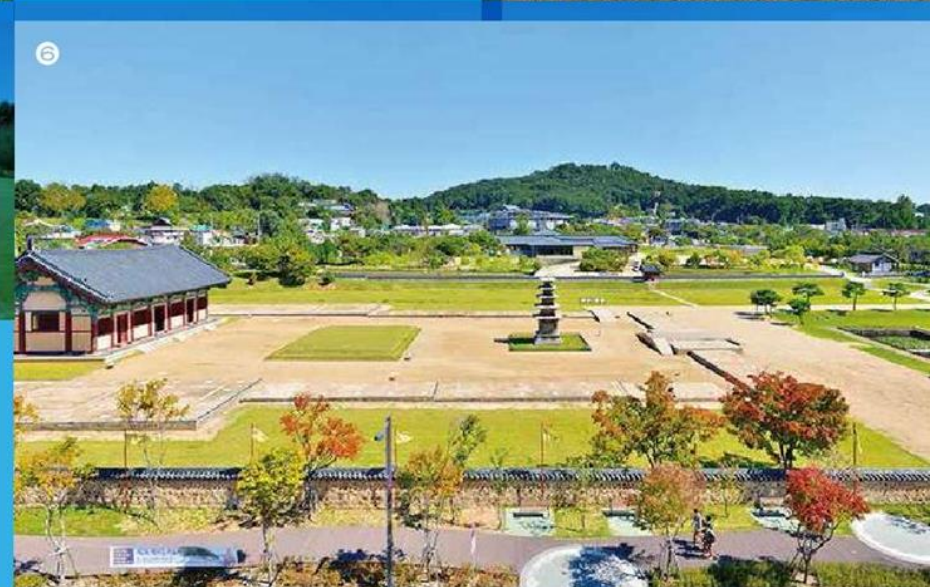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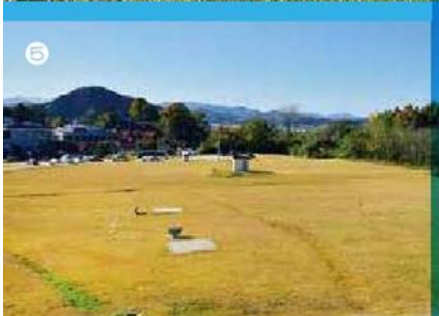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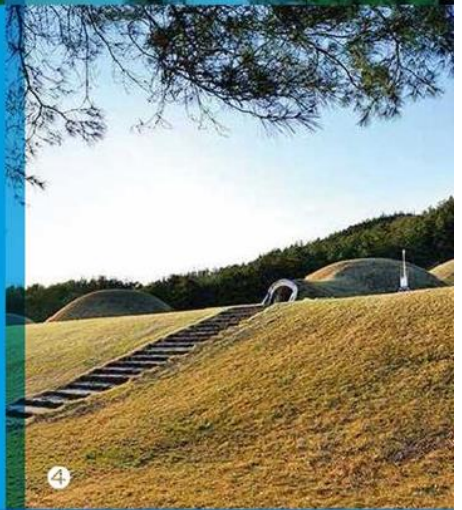
공주 ② 공산성 | 공주시 금성동 · 산성동 소재 20만㎡ 규모로 웅진시대 백제의 왕성이 자리했다.

부여 ③ 나성 | 사비 동 · 북쪽을 방어하기 위해 구축한 외곽 성으로 현재도 부여읍을 감싸고 있다.

부여 ④ 능산리고분군 | 부여읍 능산리 부여나성 밖에 인접한 왕릉으로 모두 77기로 이뤄져 있다.

부여 ⑤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 관북리 유적은 왕성의 터이고 부소산성은 그 배후 산성이다.

부여 ⑥ 정림사지 | 사비 백제기 수도 중심에 위치한 사찰 터로 정림사지 오층석탑(국보)이 있다.



扶餘



세계유산 백제역사 유적지구

58

2015.08 제68호

제279회 정례회 · 제280회 임시회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소식

CONTENTS

- 02 개 회 사
- 03 본 회 의
- 04 핫 이 슈
- 06 의원논단
- 10 생생인터뷰
- 12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16 5분발언
- 24 상임위원회
- 30 의원주장
- 32 현장의정
- 33 제279회 정례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 36 제280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 39 연구 · 토론
- 40 포토의정
- 46 의회사무처 소식
- 48 충남소개

- 발행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 편집 | 총무담당관실 기획홍보팀
- 전화 | 041)635-5102
- 팩스 | 041)635-5009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 디자인 · 제작 | (주)디자인시티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올해의 절반을 남겨놓은 푸르른 여름에 제280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난 4일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한국의 12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거머쥐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국가적 재난으로 번져갔던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이 우리도 대책본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20여일 동안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으며, 종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오랜 세월동안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풀어야 할 과제는 불경기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피서지 및 관광지에도 예년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방안과 道와 교육청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여름휴가 기간을 늘리고, 우리 지역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민선 6기가 첫 돌이 되었습니다.

21세기 환황해권 아시아 시대를 주도할 서해안 항만물류 교통망 확충과 新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이 차질 없이 진

행되어 경기부양과 민생 안전의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등을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도정과 교육 현안 사항들은 잘 반영되었는지, 연초에 제시된 사업별 비전과 청사진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진취적 대안으로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도의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도민이 주인 되는 충남』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도의회는 공감·창조·실천 의정의 3대 의정비전 아래 210만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道 및 교육청과 손잡고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끝으로,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7. 9.

충청남도의회회장 김기영



도·교육청 업무보고 청취, 도민과 밀접한 조례 심의

메르스 예방 위해 집행부와 머리 맞대는가 하면, 굵직한 현안 제언 빛나
도 본청, 사업소, 도교육청 등 업무보고 통해 향후 정책 방향 제시 등



충남도의회는 제279회 정례회와 제280회 임시회 등 2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과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모두 1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회가 제279회 개최한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또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대중국 교류를 위한 도, 시·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KTX 공주역 활성화 방안도 주문했다.

제280회 임시회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촉구(이기철) ▲백제 역사 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 관련(유찬중) ▲도민체전 정상 추진 촉구(정광섭)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김종필) 등이 논의됐다.

유익환 부의장은 “올해는 지방자치가 성년을 맞이해 보다 성숙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공부하는 의정상 정립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공주 공산성, 부여 정림사지, 익산 미륵사지 등 8곳 등재 확정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역사 문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인의 조명을 받게 됐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공주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과 부여 관북리 유적,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나성 그리고 익산의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등 8곳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북한의 고구려 유적과 신라시대의 경주역사 유적지구 등 3국의 역사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셈이다. 이번 세계유산 등재로 도민들의 자긍심이 크게 높아지고 백제문화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3농 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 신설

위원장에 전낙운 의원, 부위원장에 정광섭 의원 선임

도정 · 교육행정 역점사업 문제점 점검하고 대응방안 제시



전낙운 의원

충남도의회는 「3농 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전낙운 의원(논산2, 사진)을, 부위원장에 정광섭 의원(태안2)을 각각 선임했다.

총11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당진 ·

평택항 도계분쟁에 따른 대응방안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실패 원인과 발전 방안 △3농 혁신 발전 방안 △인사혁신 등 교육정책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사업 원인규명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특위는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적극적 추진을 독려 · 지원하기로 했다.

제10대 충남도의회, 지난 1년간 대의기관으로 도민 섬기며 귀 기울였다

현장에서 도민들과 동고동락, 산재한 현안 실마리 푸는 일등 공신...도민 의정 욕구 충족

제10대 도의회가 지난 1년간 총 9회 135일간 회기를 운영한 결과 무려 131건에 달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대부분 도민의 삶과 밀접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에 초점이 맞춰진 안건들이었다. '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85개 기관을 상대로 총 450건의 정책을 제언하거나 조치를 요구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126건의 5분 정책 발언 및 도

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내 산재한 현안 실마리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는 별개로 6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정·교육행정 현안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대안을 강도높게 제시했으며, 5개의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실정을 반영한 정책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담뱃세는 금연정책에 투자해야

가격 인상에도 세수 늘어
정책오류 입증



조길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부는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올해 1월부터 담배소비세를 큰 폭으로 올렸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이 4조37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1조2100억원) 늘어났다. 이는 흡연가들이 인상된 담뱃값에 적응하면서 다시 담배를 피우기 때문으로, 세수(稅收) 감소를 걱정했던 정책 당국이 표정을 관리하는 모습이 씁쓸해 보일 뿐이다.

정책 오류를 예상한 듯,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하던 서민용 봉초(封草) 얘기가 사라졌고, 유해성 논란을 빚은 전자담배 판촉도 극성을 부렸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우리나라 남성의 흡연율은 44.9%이다. 담뱃값 인상이 올해 얼마만큼의 금연(禁煙) 실적을 나타낼지 의문이나 담배소비세 징수율을 보면 정부 정책이 한참이나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66 단순 담뱃값 인상만으로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정책판단이 아쉽다는 생각이다 99

이처럼 담뱃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도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한 이후에 추가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단순히 담뱃값 인상만으로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정책판단이 너무 안이(安易)했다는 생각이다.

지난해까지 연평균 담뱃세로 거둔 6조8천억원 중에서 건강증진기금으로 쓰인 돈이 2조원이고, 그중에서도 실질적인 금연사업에 쓰인 돈은 고작 1.2%(240억원)에 불과하다. 사업 내역 또한 금연교육 및 홍보와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금연클리닉 운영이 전부다. 여기에 뚜렷한 금연정책은 뒷전으로 하고 공공장소와 음식점, 주점 등에서 흡연 시 자영업자와 흡연자에게 벌과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흡연자가 낸 세금은 흡연 대책을 위해 써 달라는 흡연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강증진기금의 대폭 확대를 통해 다양하고도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담뱃갑 경고 그림의 조속한 시행은 물론이고 각급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금연자 보상정책도 도입해 볼만 하다. 무해(無害)한 담배 대체 기호품의 개발·보급, 비흡연자의 간접피해 방지와 흡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흡연 공간 설치 등 공격적인 투자 정책이 요구된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흡연의 폐해가 없는 나라가 없겠지만 흡연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중국의 베이징시(北京市)는 지난 6월부터 '흡연 제한 조례'를 발령하여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친다고 한다. 몇 년 후 '담배 대국' 중국의 흡연율이 우리나라와 역전된다면 그때 가서 정부 당국은 국민들에게 무엇이 라 설명할 것인가. 당국의 진정성 있고 성의 있는 대책을 바란다.



농촌지역 119지역대 배치해 안전 강도(強道) 구축해야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우리사회에서 안전이라는 단어는 이미 필수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를 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필자는 어린 시절 위험이 도사리는 곳엔 얼씬도 하지 말라는 어머니 말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불장난을 하면 오줌을 싣는다는 말. 우리 선조들은 왜 이렇게 화재에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여겼을까.

모든 재난 사고와 화재가 일어나면 따라붙는 단어는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등이 있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둑을 잡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적기적소에 소방 장비와 소방 인력 등 안전재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말. 오래전부터 귀에 인이 박히게 들었다.

도내 도심 지역은 소방 인력과 장비 등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 문제는 농촌이다. 119지역대의 역할은 각 읍·면에 소방 인력과 장비 등을 배치해 적기적소에 화재진화, 구급활동을 담당한다. 지역에서 안전과 재산 피해를 막는 파수꾼인 셈이다. 하지만 일부 농촌지역은 이들이 전무해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진다는 말인가? 도시라고 해서, 농촌이라고 해서 안전이 등한시 되어서는 안 된다. 농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고령화에 접어들었다. 응급환자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노후화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면 소방 서비스가 꼭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소방본부가 원거리 면지역의 골든타임 확보방안으로 안전센터와 구급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다. 하지만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만으로는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 증원만이 답이다. 농촌지역 119지역대에 소방력을 배치해야 하는데도 소방공무원의 증원은 ‘울림 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매년 산정하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해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준인건비를 늘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부담이다.

그렇다면 정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족한 현장 활동 인력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늘리는 방안이다. 또 다른 방법은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든, 후자든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 인력이 부족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은 누구에게도 인정받기 어렵다. 바른말도 계속하면 잔소리가 된다. 바른말이 잔소리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농업은 누가 뭐래도 국가 기간산업



이용호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하지(夏至)를 앞두고 땀별로 달궈진 하루해가 짧게 느껴질 만큼 영농철은 바쁘다. 한해 농사 중 가장 중요한 모내기도 마무리 하였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웬지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거듭하여 최첨단 산업수출국이 되었으나, 농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해져왔다. 최근 세계적인 식량위기와 자원무기화로 치닫는 현실에 비춰볼 때, 농업은 역시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임에 틀림이 없고 이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농촌과 농업 그리고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목표아래 우

리 충남도는 3농 혁신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global)경쟁시대에 수출을 통하여 먹고 살아가야 하기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은 갈수록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물론 수출을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의 농업이 철저히 외면당한 채, 국가간 무역협상에서 골칫거리로 취급받는 현실을 개탄하며, 다시 한 번 농업의 중요성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농심(農心)은 천심(天心)이라 하였고, 농업인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시대(農者 天下之大本)를 우리 조상들은 살아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쌀값 폭락에 농민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고 있고, 정부의 농정시책에 불만이 쌓여가면서 울분을 토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구화되어가는 식습관으로 1인당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고, 쌀 재고량 초과라는 악조건이 겹친데다, 올해 1만 톤의 주식용 쌀 수입을 강행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쌀 수입에 따른 국내 쌀값 안정을 위해 약7만7천 톤을 추가 구매한 것을 환영했던 농민들은 '병(病)주고 약(藥)주는 꼴이 아닐 수 없다'며 더욱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농업, 아니 식량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농민에 대한 적절한 소득보장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적인 식량위기와 우리민족이 식량 부족으로 겪었던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누가 뭐래도 농업은 국가 기간산업임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농업학자들은 올해 엘리뇨현상으로 세계적인 대흉작을 예측하고 있다. 이는 곧 곡물가 인상으로 그치지 않고 일부 식량 자립을 외면한 국가는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위정자들은 이러한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우리 농업에 대한 인식을 경제 논리에서 탈피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이고도 거시안적으로 전향해서 살펴야 하며, 국가 기간산업(基幹産業)으로서 농업의 위상을 재정립했으면 한다.



상임위원회 순례, 생생인터뷰

교육위원회

금산
순서

- ① 의회운영위원회
- ② 문화복지위원회
- ③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 ④ 행정자치위원회
- 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⑥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



김석곤 의원



김종문 의원



서형달 의원



송덕빈 의원



유익환 의원



장기승 의원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의회 가장 큰 변화 중심에는 교육위원회가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의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선봉에 섰기 때문이다.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홍성현 위원장을 필두로 한 총 8명으로 구성됐다. 맹정호 부위원장, 김석곤·송덕빈·유익환·김종문·서형달·장기승 의원 등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가진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홍성현 위원장(천안1)은 "도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막대하고, 9대 의회 활동의 연속성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당면 교육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위의 지난 1년 동안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더욱 날카로워졌고, 대안제시까지 이어지는 위원회 활동에 갈채가 나오고 있다. 실제 교육위는 제10대 의회 개원 후 농어촌지역의 통폐합한 학교를 지원·육성할 근거를 마련했다. 홍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뚝뚝 뚫어 이 학교를 지원할 조례를 제정한 덕분이다.

맹정호 부위원장(서산1)은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의 교수 학습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교육 환경개선,

내실 있는 학교 경영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은 도농 간 교육격차가 매우 심각한 현실로 학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할 것이며 일하면 손해가 아닌 혜택을 보는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덕빈 의원(논산1)은 임의적으로 방학·휴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돌봄교실이 더욱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익환 의원(태안1)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열악한 CCTV 개선과 함께 다양한 교육을 통한 예방활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문 의원(천안4)은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등 교육여건의 변화에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다.

서형달 의원(서천1)은 충남교육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교사들과 교육행정의 노력이 절실하며 미래 꿈나무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장기승 의원(아산3)은 지역에서 지역인재 이탈방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수도권에 학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성현 위원장 INTERVIEW

교육에 대한 욕구의 분야가 계속해서 넓어가고 있다. 교육위원회 역할을 설명해 달라.

교육위원회는 210만 충남도민과 교육가족의 교육복지를 책임지는 막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도교육청이 다양한 교육정책을 제시하면 교육위는 그 정책이 제대로 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유아교육부터 초·중·고등학교 모두 학교 현장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있다. 앞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및 인재 육성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관심을 두고 추진 중인 교육 정책은?

꿈나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유독 하나에만 관심을 둘 수 없다. 교육정책 하나하나가 모두 꿈나무들의 꿈을 키울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사교육과 공교육의 조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초학력 미진자, 소외계층 학생 등에 대한 지원 모두 교육위원회가 관심을 두어야 할 사안이다. 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 학교 체육 문제,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등 교육위원회의 손길이 모두 필요하다. 교육위원들을 비롯한 교육 가족이 모두 일심동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위원과 도교육청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

날로 심각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에 대한 대안은?

학교폭력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언론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충남지역 83개의 학교폭력서클(1천488명)을 해체시켰다. 지난 3년간 적발한 학교폭력 수만 무려 776개에 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기에 발생한다고 본다. 학교전담경찰관과 교직원 등이 모든 학생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방 활동 및 다양한 지원과 계도 등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교권침해 문제와 관련, 학생과 학부모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갖도록 할 때 비로소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3박자가 맞춰질 때 가능하다. 학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천안고교 평준화 문제에 대한 소회는?

고교평준화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었다. 도교육청과 학부모, 학생, 도의회 모두 소통이 부족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도의회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심정과 요구내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가 도민에게 밝혔듯이 해결점을 찾는 데 성공했다. 우리 교육위는 충남의 더 좋은 교육,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위에서는 의원들이 걱정하는 우려해소와 쟁점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역구 현안은 무엇이고, 해결 방법은?

천안 발전의 축이 한 곳으로 치우쳐서는 명품도시 천안을 기대할 수 없다. 개발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낙후한 동남부권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도농복합도시가 됐을 때 비로소 완성된 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체육이 더욱 견고하고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겠다. 학교 체육관 설립 역시 중요하다. 학생들이 마음 편히 뛰어놀 체육 공간이 부족한 탓이다. 또 동남부권에 수영장을 신설하는 동시에 오이, 멜론 작목반 비닐하우스 교체 등 시설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 이밖에 천안의료원을 통한 고령 농민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학교 시설·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겠다.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눔과 배려, 사랑과 믿음을 심어주는 인성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제는 함께 느끼고 함께 열어나가는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을 실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충남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210만 충남인구 중 61만명이 천안 인구이다. 예산 배정 등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력하겠다. 전통이 살아 숨 쉬고 시민문화가 바로 선 천안. 교육백년을 꿈꾸는 동시에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앞장서겠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제279회 정례회



김원태 의원

Q1 도청이전으로 원거리에 있는 동남권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가칭 “동남권 출장소” 설치 의견은?

A1 동남권 사무소 설치 제안문제에 대해서 관할구역이라든지 위치문제, 비용문제, 건물을 신

축할거냐 아니면 기존 건물을 쓸거냐 임대할거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르겠지만 다른 시도를 보면 기능에 따라서 인력이 17명에서 90명까지 설치하는 경우도 있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안을 준비해서 제안 말씀 올릴 때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기 바람.

Q2 메르스 확산에 따른 대응대책은?

A2 국가질병관리체제 내에서 행정의 역할을 하고,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 했음. 도립의료원의 역할을 높혀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홍보협력관실과 긴밀히 협조하여 메르스관련 동향을 신속하게 알리고 있음. 메르스 추가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윤석우 의원

Q1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 의료원 진료비 감면이 필요해 보이는데?

A1 현재 지방의료원에서는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으나 의료원별로 차이가 있음. 국가가 진

정한 영웅으로 잘 예우하고 존경해 드려야 하지만 형편상 지원이 미흡한 것이 사실. 도립의료원 사용문제와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Q2 KTX 공주역 활성화를 위한 진입로 등 개선대책은?

A2 KTX공주역의 여러 가지 개발 여건을 능동적으로 마련해 나가면서 공주역세권 개발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공주역세권은 광역적 개념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를 연구해 적합한 시설투자나 민간투자를 유도하겠음. 이를 위해 공주와 논산, 부여, 청양, 계룡시 등 5개 시·군과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음.



김종문 의원

Q1 저소득층 정보화 자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대책은?

A1 현재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해 투자하는 예산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 하지만 이마저도 안 하게 될 경우 완전 무방비로 노출되는 어려움이 있음. 앞으로 망 차단 방식과 유료 차단 서비스 두 가지를 병행해 진행하고자 함.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더 검토해 개선점을 찾겠음.

Q2 학생용 PC의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대한 대책은?

A2 앞으로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법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Q3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 확대 방안은?

A3 하반기에 시·군으로 확대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문구점의 구매실적, 또 학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해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음.



강용일 의원

Q1 백제문화단지(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2015년1월5일)의 민자 부문 투자 지연 사유와 관련 대책은?

A1 기업 내부 자금과 기타 사정으로 협상내용 등이 일부 변경됐음. 하지만 롯데 측의 사업 의지는 분명함. 이 사업을 착수하는 방향으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있음. 협상과정과 변경내용에 대해 더 꼼꼼히 챙기겠음.

Q2 백제문화제의 발전 방안은?

A2 지역축제가 가진 내용과 콘텐츠 측면에서 한계는 있음. 역사 문화를 소재로 한 지역 축제와 제례의식이 자기 축제로 어떻게 발돋움할 것이냐가 고민임.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임. 도가 주관하는 행사는 더 책임감을 높이고 재정투자를 할 것임.

Q3 우리나라 농업 현실과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심각한 농촌 일손부족 대책은?

A3 소규모 영농 단위의 농가당 경지면적 제한성이 선진국과 우리 농업 간 가장 큰 차이점임. 사실상 기계화를 통한 대규모 산업적 생산성을 높이기가 어려운 처지임. 우리 농업과 농촌현실에서는 산업인력이 필요한. 총량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고민하겠음. 전체적인 산업제조업의 노동력과 임금문제를 나름대로 정비해 정부에 제안하겠음.



전낙운 의원

Q1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훈련소역 신설 방안 및 구 호남선 직선화 문제에 따른 도의 노력은?

A1 정부가 역을 정하는 것은 수익성만 따지는 것이 아닌 장차 지역 발전이라는 미래의 가치까지 놓고 정책에 개입하고 있음. 때문에 역을 신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 하지만 접근 도로 등 편의 지원과 주변

지역 발전을 계획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역할임. 구 호남선 직선화 문제 역시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협의를 할 것임.

Q2 지역별 읍 단위 소도시에 농협 간 경쟁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도가 앞장서 정부에 건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A2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 간 금융상품과 역할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겠음.

Q3 수요자가 조성하는 논산시 태화(태성화학) 산업단지를 증축하기에 앞서 지역민 간 상생할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A3 교통, 환경 등 지역민의 반대를 어떻게 소화해 낼 지가 가장 큰 문제. 지역민이 지역개발 자체에 대해 원천적 반대를 할 경우 서로 타협안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투자자와 지역민 간 대화와 타협의 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 현장 방문과 점검을 강화해 대응책을 찾겠음.

Q4 매년 반복되는 가뭄 피해와 장기적 관점에서 한해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A4 한해피해에 대한 보고를 받아보면 충청남도도 아직 심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하지만 현장의 상황은 전혀 다름. 주요한 관계 시설 내의 저수지 용량과 한해 피해의 우려에 대해 긴박하게 판단하겠음.



김용규 의원

Q1 충청남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54.7%로, 매우 미흡한 실정. 향후 보급계획과 대책은?

A1 도시가스 보급이 시급한 지역부터 먼저 보급하고, 매년 3%이상 공급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앞으로 공급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에너지소외지역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음. 2018년까지 보급률을 70%까지 확대하겠음.



Q2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의 학교 수준별 지원에 관한 문제점은?

A2 학교장 추천에 따라 학생 재적 인원 중에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는 15%,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는 30%를 감면하고 있음. 저소득층 학생들이 최대한 감면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Q3 학생 생활지도 중 발생하는 교권침해 해결방안은?

A3 교권침해에 관해서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병행할 계획임. 교사와 학부모 간 소소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 현재 7명의 변호사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태. 변호사를 더 채용할 수 있다면 더 능동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임.



윤시상 의원

Q1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현황과 개선점은?

A1 개청식을 할때부터 '해양건도'라는 이름을 갖고 해양정책을 능동적으로 시작하여 올해1월에 환황해경제T/ 팀을 구성하고 대중국 수출지원과 투자유치 전략, 정보 분야의 교류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수출육성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통적 방법 탈피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 해외전략사업은 관광과 교육, 사회서비스 산업 쪽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공간적으로는 중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전체로 범위를 넓혀 교역과 서비스 및 사회 서비스산업까지 경제산업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환황해경제T/ 팀의 전략임. 시군과의 협력관계를 위해 시군의 대중국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공동대응 포럼과 연수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음. 대중국 교류를 위한 도의 전문적인 역량과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전략에 맞는 전문 인력 편제를 더 강화하겠음. 경제산업비전과 서해안비전들을 구체화시키는 전략을 세워 나가겠음.

Q2 충남도의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향후계획은?

A2 청주공항이 활성화됨에 따라 천안·아산을 경유해서 서울

이나 제주로 가는 패턴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 대산항이 개항되면 충남에 새로운 관광의 기회가 될 것임. 따라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상품이나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특산물 판매센터를 대산항에 신설하여 지역주민 소득에 기여하고자 함. 서산 지역이 아니라면 천안·아산지역 등 도내를 경유하여 서울로 가는 패턴을 만들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임. 백제문화권 유네스코 지정, 유교문화, 건강식품(인삼 등)과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한 시·군자치단체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을 면밀히 분석·실행하겠음.

Q3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은?

A3 첫째로 학부모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고 있으며, 지난 4월에 개최된 도의회 의정토론회(제목: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대비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방안)는 학부모들의 인식제고에 크게 기여됨. 앞으로도 찾아가는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 학부모와의 대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임.

둘째로 각 교육지원청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 자유학기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지역체험처 발굴·매칭으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임.

셋째, 교육청과 도청, 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간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는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이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Q4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가 미흡한데 교육청의 대안은?

A4 일반고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학습기회 제공에 노력하고 있음. 이에 대한 사업으로 진로집중과정 편성 및 운영의 다양화, 학생진로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 진로직업교

육 내실화, 수업 및 학습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73개교, 35억여원을 지원하고 있음. 앞으로도 지속해서 진로집중과정을 다양화·활성화하여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데 적극 노력하겠음.



김종필 의원

Q1 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 처리방법의 개선 계획은?

A1 순세계잉여금의 처리방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음. 순세계 잉여금을 사업비로 쓰는 방안과 기본 재산에 편

입하여 기관별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가지고 출연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음. 예산편성 기준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양자 간 장·단점을 적절히 조화해 예산이 한 톨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이공휘 의원

Q1 충남의 R&D 예산 확보 성과와 향후 계획은?

A1 R&D 자금을 지방자치의 현재 수준에서 독자적으로 편성하기에는 재정형편상 어려움. &D 자금이 단지 중소기업들이 그 구조 내에

서 경쟁을 하는데 약간의 생산성 효과를 볼뿐,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에는 다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D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보면 회사의 경영합리화일 뿐이지, 중소기업의 도전을 향한 씨앗자금은 아닌 것 같음. R&D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등 통로를 만들고자 함. 지역의 R&D 사업을 통해서 지역산업과 지역발전이 연계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

Q2 국비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계획이 있다면?

A2 원천적인 기획을 통해서 각 부처별로 더 많은 것을 제안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이 필요함. 먼저 역동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원천적 제안능력을 공직자들이 갖고 그 매뉴얼들을 더 정비해서 중앙정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Q3 5년동안의 경제분야 MOU 체결현황 및 후속조치 계획은?

A3 충남도와 MOU를 체결하고 투자철회가 된 회사가 3개사가 있음. 회사의 기업경영상 어려움과 투자시기 변화 때문에 산단조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상의 문제가 있었음.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MOU 체결 이후에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킬지 고민하겠음. MOU 체결 시 발표되는 투자 효과는 생산유발 효과와 수입대체 효과 등이 있음. 앞으로 MOU 체결 시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MOU 체결 당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대응하겠음.

Q4 충남체육의 발전 및 중앙예산 확보,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향후계획은?

A4 1조원을 충남체육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국비가 3,000억 규모임. 엄청 많은 규모이고 실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효과가 나올 수 있음.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공무원, 전문가, 의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매년 상황에 맞게 변화를 시키고 수정해야함. 체육진흥협의회가 4S 정책아카데미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음. 3,000억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시·군과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 스포츠마케팅의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 현장 공무원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있음.

Q5 교무실 및 행정실 등의 사무집기 현황 및 개선대책은?

A5 각급 학교의 기본운영비를 매년 2~3%씩 인상하였음. 올해도 3.4% 인상 교부함. 교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음. 현재 학교에 배부된 기본운영비를 가지고 사무용기기를 바꾸도록 유도해 가면서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5분 발언



도시농촌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상생 발전 대안 제시

— 송덕빈 의원 [본회의 2015. 6. 15]

- 저출산, 이농현상 도내 농어촌학생 수 대폭 감소...지역발전 걸림돌
- 1982년부터 도내 408학교 폐지·축소...통학편의 제공으로 학생 유입 서둘러야

저출산, 이농현상 등으로 도내 농어촌학생 수가 대폭으로 감소, 결국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위기에 직면했다. 1982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408개 학교가 폐지되거나 축소됐다.

최근 학부모들은 공부 위주가 아닌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원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소규모 학교 이전을 바라고 있지만, 통학 편의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망설이고 있다.

학교는 학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학교는 지역의 중심체 역할을 하며 지역의 운명을 같이하는 곳이다.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학생 유입은 도시지역 학교의 과대 과밀 현상을 해소시킬 대안이고,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교육이 생기 있게 살아날 수 있는 해법이다.



학교 체육관 운영비 지원 촉구

— 오배근 의원 [본회의 2015. 6. 15]

- 도민 체육 활동 및 건강 증진 보탬...운영비 부족분 도비로 지원해야
- 일선 학교 운영부담 등으로 체육관 개방 꺼려...결국 도민 체육활동 걸림돌

충남지역 학교 체육관을 도민에게 전면 개방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소요 경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해야 한다. 학교들이 시설물 관리에 부담을 느껴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체육관을 개방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유발한다.

일부 학교는 사용자들의 부담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체육관 운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매년 체육관 운영에 적자를 면치 못하다 보니 편의시설 확충은 고사하고 당장 고장 난 시설 보수마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한 학교는 체육관의 문을 닫거나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체육관을 이용하려는 도민들이 갈등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건전한 여가 스포츠와 체력단련을 위해 부족한 운영비를 조사해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가뭄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촉구

— 김용필 의원 [본회의 2015. 6. 15]

- 강우량 평년 대비 58%에 그쳐...일부지역 아직 모내기 못해 농가 피해
- 도내 11만 5천99개의 관정, 가뭄 피해에 따른 제구실 못해

충북부지역 가뭄피해 확산으로 논·밭의 물 마름과 발작물 시들현상이 크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예산군과 당진시의 농경지인 예당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예당저수지의 저수율은 24.7%에 불과한 상태다.

태안군 등 일부 지역은 모내기를 하지 못했다. 논과 밭작물이 가뭄피해의 한 복판에 놓여 있다. 문제는 도내 하루 80t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11만 5천99개의 관정 등이 가뭄피해에 따른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을 다녀 보면 미가동 관정들이 많이 보인다. 고장이 난 것은 수리해 장기적 가뭄에 대비하고, 환경성을 고려해 새로운 관정 보급 등이 필요하다. 도내 898개의 저수지의 저수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단수조치도 예견된다. 절약 단수 및 준설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물 부족으로 정상적인 작물 성장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병해충 확산이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한다.



격렬비열도 관광자원화 앞당겨야

— 정광섭 의원 [본회의 2015. 6. 15]

-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미확정...영토분쟁 씨앗 작용 우려
- 항만시설 건설 등 인프라 구축 선점 통한 지역경제 이바지해야

격렬비열도가 중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아직 확정 짓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영토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관광자원화를 앞당겨 서둘러야 한다. 격렬비열도는 최서단 영해 기준점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매우 중요한 섬으로 서해의 독도와 다른 섬과는 성격을 띠고 있지만, 정부의 관심은 부족하기만 하다. 격렬비열도에 대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항만시설 건설 등이 시급하다.

도가 도서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담보상태인데 우리 영해를 넘나드는 중국어선의 불법 어로가 잦은 상황에서 격렬비열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도가 앞장서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격렬비열도에 추진할 수 있는 단위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웅도, 난도, 병풍도 등 아름다운 주변 섬과 연계한 관광개발사업도 노력해야 한다.



교통약자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여건 개선 촉구

— 정정희 의원 [본회의 2015. 6. 15]

- 도내 특별교통수단 도입 법정 의무대수(132) 크게 못미쳐...50% 이상 확충돼야

충남지역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이 지역 간 소통 단절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용자 대비 장애인콜택시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시·군 경계를 넘나들 때 운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아 보인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여건의 개선을 촉구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교통약자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갖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시·군 경계를 이유로 운행을 거부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장기적인 차원에서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충남 청소년 성 문화센터 증설 촉구

- 김연 의원 [본회의 2015. 7. 2]

- 도내 성 문화센터 2곳에 불과...전북·강원(4곳), 충북(3곳)과 대조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해마다 증가 추세...전체 피해자 중 52% 달해

최근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폭력이나 성매매, 음란물 등에 노출돼 있어 충남 청소년 성문화센터 증설을 촉구한다. 도내 성문화센터는 천안(고정형)과 내포(이동형) 등 총 2곳에 설립 운영 중이다. 하지만 2곳만으로는 도내 청소년의 성 문화를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 강원도나 전북도는 각각 4곳, 충북도의 경우 3곳에서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가 지난해 여성가족부에 성문화센터 공모를 신청해 국비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았지만,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비 전액을 반납할 위기에 놓였다. 2012년 아동성폭력 실태 및 예산사업에 관한 자료만 보더라도 미성년자가 성폭력에 가담한 사례가 52%에 달했다.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형 중심적인 성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문화센터의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전쟁 때 학살된 희생자 추모 위령 사업 촉구

- 윤지상 의원 [본회의 2015. 7. 2]

- 해당 조례안 제정 당위성 설명...이미 경기 등 3개 시·도 운영 중
- 한국전쟁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 한 풀어줘야 할 시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쟁에 의한 인명손실은 무려 520만명으로 이 중 사망과 학살로 피해를 본 민간인은 37만명, 부상자 23만명, 납치 및 행방불명된 사람은 39만명 등에 이른다. 한국전쟁 당시 충남지역에서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위령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다.

참혹한 전쟁 앞에 인권은 처참히 짓밟히고 전쟁이 남긴 상처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도내 한국전쟁 집단희생자 유가족들의 인권은 우리 사회 그 어떤 인권 취약계층보다 심각하다. 도 차원의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자 위령 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충남도에서도 한국전쟁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억울한 죽음 앞에 비통함에 잠겨 있던 유가족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때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부담과 실망 남긴 정책으로 전락

— 유병국 의원 [본회의 2015. 7. 2]

- 공공형 운영체계 구축 미비, 차별화 없거나 센터 공간 협소로 교차 오염 우려
- 냉동식품, 육류 등 상온 노출...안전에 큰 위협, 시·군 직영으로 개선 및 컨트롤 타워 구축 시급

충남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학생들에게 부담을, 농민들에겐 실망만 남긴 정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도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천안시를 비롯해 아산시, 당진시, 홍성군, 청양군, 부여군 등 6곳에 설립·운영 중이고, 공주시와 논산시는 현재 센터를 설립하고 있는데 센터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다. ▲공공형 운영체계 구축 미비 ▲위탁 체계에 따른 운영비 가중 ▲센터 협소 ▲신선도 하락 등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센터는 시·군이 직영을, 물류기능은 조공법인에 위탁해야 한다. 도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공급량을 90% 이상 끌어올려야 하고, 충남급식의 컨트롤 타워 구실을 할 광역급식지원센터의 조직과 역량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농가의 조직화와 계약생산, 품질관리, 출하지도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메르스로 침체한 경기 회복 정책 마련 촉구

— 서형달 의원 [본회의 2015. 7. 2]

- 지역 경제 곤두박질...전통시장 방문의 날 지정 등 지자체 차원 대책 마련 필요

메르스로 인한 지역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에 따른 경기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세월호 사건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잠잠해진 지역 경제가 최근 살아나는가 싶더니 메르스로 폭격을 맞았다. 도내 모든 업계와 농가의 타격이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계에서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 중소제조업체 역시 생산 활동을 축소하고, 이것이 소비심리 위축과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메르스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시·군의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도는 각종 행사, 모임 등을 추진해야 하고 메르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발생하는 신병에도 관리와 통제를 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



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촉구

- 홍성현 의원 [본회의 2015. 7. 9]

- 도지정문화재 주변 최대 300m 개발 제한...개발 행위 악영향
- 사유재산권 피해 보지 않도록 도민에 불합리한 규제 조례 개정해야

2010년 2월 개정한 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의 일부조항이 지역개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도지정 문화재 주변의 경우 최대 300m까지 문화재 보호 범위로 규정,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있어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6년 아우내 3.1운동 독립사적지(제58호)로 지정된 천안시 병천면의 경우 외곽경계로부터 최대 300m까지 건축 허가를 제한하고 300m 이내에서는 5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도, 1천㎡ 이상 확장 할 수도 없어 개발 행위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인구가 급증해 유입인구의 주거 용지 확장이 절실한데도, 조례에 묶여 제한받고 있다. 따라서 사유재산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충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등한시

- 이기철 의원 [본회의 2015. 7. 9]

- 조례 제정해 지원키로 했지만, 책임은 시·군에 전가...지원 및 예우 미흡
- 매년 500명 이상 유공자 사망... 하루 빨리 지원 및 예우 체계 갖춰야

도내 참전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련한 조례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도가 지급한다고 해 놓고 시·군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참전유공자는 1만2천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도가 지급한 참전 명예수당(월 3만원) 및 사망 위로금(15만원)은 '0원'이다.

우리나라를 강국으로 만드는 데에는 유공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작 당사자들은 형편없는 예우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보람과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학생들에게 전쟁의 참상을 교육하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안보의식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세계유산 등재 백제역사유적 갈고 닦아 후손에 계승해야

— 유찬중 의원 [본회의 2015. 7. 9]

- 예산 확보와 인력 확충 등 전담기구 확충...발 빠른 대응 촉구
- 세계유산 백제유적, 지역 발전과 균형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백제역사유적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과 보존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인력 확충,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충청과 호남의 백제 문화에 대한 시너지 효과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많은 만큼 발 빠른 대처를 통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공주 공산성의 성벽 일부가 무너진 경험을 교훈삼아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을 되짚어야 하며 유네스코 등재에 안주하지 말고 후손들에게 인류의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과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른 시일 내 전담기구의 확대와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백제문화에 대한 콘텐츠 개발, 백제문화제 프로그램 다양화, 국내외 관광객 유치 계획 등이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도로와 교통 등 인프라 구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상임위 사전 워크숍 개최 제안

— 조아환 의원 [본회의 2015. 7. 16]

- 의원 각자 제시하는 의견 자칫 주관적이고, 공염불 될 우려 있는 만큼 사전 검토제 도입
- 업무 보고 형태 역시 실·국장 체제에서 과장, 전문가 등으로 확대...깊이 있는 업무 파악 요청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와 의견 교환을 위해 사전 워크숍 시행을 제안한다. 현재 상임위 주요활동은 업무보고 청취, 현장방문, 행정감사, 예산결산심의 등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 자칫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워크숍을 통해 각자가 지닌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해당 상임위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업무보고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실·국장 1인이 전체 업무를 보고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큰 틀은 실국장이 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 환경·생활권 보호 촉구

— 김종필 의원 [본회의 2015. 7. 16]

-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대책 마련 촉구
- 국세와 지방세 비율 형평성 어긋나... 지역 경제 걸림돌, 지방세는 국세의 1%도 못 미쳐

대산산업단지는 특성상 위험물을 제조하고, 취급하기에 대형 참사 및 인명피해 위험이 상존하고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가스 악취와 매연, 소음, 차량 체증 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이 대산산업단지 주변 대기 유해 오염물질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벤젠 등 발암 우려 물질이 허용 수치를 상당수 초과했다.

또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국세와 지방세 납부 비율이 불공정하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 70여개 기업이 1만5천여명의 종사자를 두고 가동 중으로 지난해 국세는 총 18조2천917억원인 반면 지방세는 이에 1%도 미치지 못하는 1천760억원에 불과하다. 전남도와 울산시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가 타광역단체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충남도 민항 유치를 위한 전담팀 구성 제안

— 이종화 의원 [본회의 2015. 7. 16]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 관광객 급속 증가 예상...민항 유치 시급
- 충남 발전과 환황해권 교역 전진기지 성장 선점 위한 출발점... 적극성 보여야

충남도가 도내 민항 유치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돌입해야 한다.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의 타당성과 이를 유치하기 위한 전담팀 구성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국제항공여객은 지난해 5천677만명, 국내항공여객은 2천464만명으로, 항공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 추세다.

이처럼 국내외 여객 이용객은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광역도 중 공항시설이 없는 곳은 충남이 유일하다.

태안기업도시, 안면도, 서산바이오웰빙특구, 백제문화권 등 충남의 관광 지형이 크게 변하고 있다. 여건 변화로 항공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이곳에 대형 면세점 등을 유치해 중국 관광객이 충남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남이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중간자 역할이 아닌 머물 수 있는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민항 유치가 시급하다.

의회운영위원회

사무처 인력진단 통한 자문분야 확대운영 필요

입법정책자문관 신설 등 타시·도 사례 분석 도입방안 마련해야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현실성 있는 예산지원 절실



조길형 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



강용일 의원



김동욱 의원



김응규 의원



맹정호 의원



유병국 의원



유한중 의원



정정희 의원

운영위는 사무처소관 상반기 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사무처 인력진단을 통해 입법정책자문관 설치 및 자문분야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무처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모든 의원들이 균형 있게 홍보될 수 있도록 편집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연구모임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연구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회의참석, 자료수집, 현장방문, 보고서 제작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현행 지원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연구모임을 활성화 하기 위해 현실적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도민안전 사령탑 '재난안전실' 신설,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위한 규제개혁 적극 나서야
서울 충남학사 조속 건립과 충남인재 육성위한 기금마련 필요



백낙구 위원장



김동욱 부위원장



유병국 의원



윤지상 의원



이기철 의원



이용호 의원



조길행 의원



조치연 의원



행자위는 충남도의 재난안전총괄조직인 재난안전실을 신설하는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재난안전실과 집행부서간 업무 조율을 통해 메르스 대량 감염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일시차입금을 쓰고, 그 이자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재정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기획조정실 등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규제개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충청남도가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충남인재의 육성과 수도권 대학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 충남학사 조속 건립을 촉구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메르스 등 위기능력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투자확대 강조

출연기관 낭비성 예산 편성 감독체계 강화하고
의료관광 및 식품 기부 활성화에 위한 제도마련 필요



오배근 위원장



유찬중 부위원장



김연 의원



김원태 의원



김종필 의원



윤석우 의원



이공휘 의원



정정희 의원

문복위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관련해서 일부 출연기관
의 출연금 등에 대한 집행 상황과 순세계잉여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
적하고 낭비성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
문했다.



또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메르스 등 각종 의료 관련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 의
료원 시설 장비 투자를 확대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에 대
한 의료 관광 서비스 지원을 골자로
하는 '충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
한 조례안'과 기부식품을 생활이 어
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을 각각 심의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도내 기업 유턴방지와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한 대책 강구 주문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기업유치 대책 촉구
농산물검사소 예산과 인력 충분히 확보해 운영에 차질 없어야



김홍열 위원장



강용일 부위원장



김명선 의원



김문규 의원



김복만 의원



김용필 의원



전낙운 의원



홍재표 의원



농경환위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재 추진중인 농산물검사소 신축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운영에 차질 없도록 주문했다. 또한 도내 악취 관리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법적기준과 가이드라인 강화를 중앙에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산업실 업무보고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유턴방지와 기업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계속되는 가뭄에 따라 최대 피해지인 태안지역을 방문하여 농심을 달래고 지원방안을 강구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지역균형 발전, 유형별 재난안전 관리기준 시스템 구축 절실

지방도 정비예산 확충 대책마련 강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매뉴얼 개발보급 주문



이중화 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



신재원 의원



오인철 의원



이진환 의원



정광섭 의원



조이환 의원



안전해소위는 소관부서 2014회계연도 예산 결산 심사에서 최근 5년간 지방도 정비 사업 예산이 줄고 있다며 예산 확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 조건 불리 지역 수산 직불제 경상보조금이 예산액 대비 32.6%에 해당하는 2억4천96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2015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받는 자리에서는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중장기 개발 계획과 서북부지역의 난개발 예방을 위한 관리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재난분야에 대해서도 도민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연구 기능을 보강해 도내 취약 분야의 재난 유형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효율적인 교육예산 운용, 당면 교육현안 추진 철저

균형있는 교육예산 편성과 집행,
자유학기제 시행 준비 및 인성교육 법제화 관련 교사 숙선수범 주문



홍성현 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



김석곤 의원



김종문 의원



서형달 의원



송덕빈 의원



유익환 의원



장기승 의원



교육위는 도교육청에 대한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이월예 산 증액, 부적정 예비비 사용 등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질

주문했다. 인성교육 법제화와 관련하여 교사 스스로가 인격과 품위를 갖춰 서로 존중하는 교육을 실천해야 한 다고 제안했다.

타했다. 또, 연말 예산 몰아 쓰기 관행과 필요사업에 대 한 예산편성 의지 부족 등을 지적하고 균형있는 예산편 성과 집행을 강조했다.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 서는 내년에 전면 시행하는 자유학기제와 관련, 다양한 진로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 록 지역별 유관기관과 긴밀 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을

의원주장



맹정호 의원

6.29

“대부분 학교 화장실이 탈의실”

⇒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절반 이상 탈의실 없어

충남도내 213개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4개 학교만 탈의실을 보유하고 있다. 탈의실의 필요성이 더 많은 남녀공학 고등학교의 경우 74개교 중 26개교만 탈의실이 있어 여학생은 물론 남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신체적인 변화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화장실을 탈의실로 강요하는 것은 교육 당국의 폭력으로, 학생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탈의실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7.15

서산“가칭”서남초등학교 신설 서둘러야

⇒ 경제적인 논리로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은 맞지 않아

교육부가 국가재정 형편의 어려움을 들어 학교 신설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서산지역의 “가칭” 서남초등학교 신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서 조속한 학교신설이 필요하다. 정부는 확실적인 기준을 배제하고 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과 주변 환경을 면밀히 살펴 조속한 시일 내 학교가 신설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조길형 의원

7.14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발 빠른 후속조치 촉구

- ⇒ 초기 목표 설정 여부에 따라 균형발전, 경제 활성화, 도민 화합 등 성패 달려 있어
- ⇒ 공주·부여 양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공감 마스터 플랜 수립 및 관광 콘텐츠 개발 시급

백제 시대 역사유적 8개 자구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가 국가와 지역 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현재 백제역사유적지구등재추진단이 활동하고 있지만 충남을 활동지로 하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고 확보한 국비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등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백제 역사 유적만의 독창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광 및 보존과 개발을 위한 인프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지역민의 공감과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최근 문을 연 KTX 공주역사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변 도로 확충과 백제권 관광 상품의 개발 등이 시급하다.



김용필 의원

7.15

“충남농업기술원 매너리즘에 빠졌다”

- ⇒ 올 초 조직개편 통해 융·복합 혁신 나섰지만, 성과 미미… 농가 소득 올릴 특단대책 세워야
- ⇒ 토마토, 딸기 품종 등 타 지자체보다 수출·개발 밀리는 모습, 감사 적발 등 총체적 문제 지적

충남도가 올 초 한·중 FTA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지도 업무를 융·복합하고, 지역특산작목 연구소를 신설하는 골자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문제는 조직개편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도내 농민 소득 증대는 물론 조직 면면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부여토마토시험장이 과채연구소로 명칭을 바꿨지만 토마토 수출에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등 정체기를 걷고 있다. 설향과 매향 등 딸기 품종 개발로 앞서가던 충남 딸기가 최근 경북농업기술원의 기술에 밀려나는 모습이다. 변화무쌍한 농업환경을 파악하고 혁신해야 한다.

현장의정

좌충우돌 교통사고 체험과 서산 비행장 민항유치 위해 현장 방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6. 22)



- 22일 경북 상주시 교통안전교육센터 현장을 방문
해 교통사고 몸으로 느껴
-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위한 항공 수요 파악 및 소방
시설 관리 상태 점검

현장의정

농경환위, 가뭄 피해 지역 찾아 농심(農心)달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6. 24)



- 가뭄으로 비상 급수가 이뤄지는 현장 등 찾아 대
응책 마련 고심...지원 방안 등 검토

충남학생기숙사 신축현장 점검

행정자치위원회 (6. 24)



- 충남인재 육성을 위한 서울학사 건립 기금 마련
서둘러야

문화재 관리 점검 현장방문

문화복지위원회 (6. 24)



- 김좌진 장군, 한용운 선생 생가지 방문 및 수덕사
문화재 현장 점검

제279회 정례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총16건

조례안 10, 예산안 1, 결산 승인의건 5
원안가결 14, 수정가결 2

처리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요 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용필 의원 (김홍열, 강용일, 김문규, 김명선, 김복만, 전낙운, 홍재표, 유병국 의원)	원안 가결	- 서민경제 안정,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지원계획수립(3년마다), 실태조사, 지원사업, 상인교육, 빈점포 활용, 우선구매,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동욱 의원 (백낙구, 이기철, 조치연, 조길행, 유병국, 윤지상, 이용호 의원)	원안 가결	- 도에서 제작·활용하는 홍보 물의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홍보물의 정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대상(부서별 제작비 1천만 원이상), 판매 보급, 판매 수수료 등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공휘 의원 (오배근, 유찬중, 윤석우, 김 연, 김원태, 김종필, 정정희 의원)	원안 가결	- 의료관광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용어 정의, 적용 범위, 기본 계획 수립, 의료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안내센터 설치 운영, 인력 양성, 사업 지원, 선의료기관 지정, 업무 위탁 등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원태 의원 (오배근, 유찬중, 윤석우, 김 연, 김종필, 이공휘, 정정희 의원)	원안 가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도지사의 책무(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 사업의 지원 장려 등), 실태조사, 보조금 지원,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 평가 등 규정

처리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요 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 자치단체 재난안전기구 신설 의무화 등 국·도정 현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구 조정 ⇨ 재난안전실 신설: 안전총괄과 + 치수방재과 ⇨ 안전자치행정국 명칭 변경: 자치행정국 ● 기구 신설 등에 따른 일반직 정원 23명 증원 ⇨ 재난안전기구 신설: 7명, 국·도정 현안수요: 16명 ●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부족인력 중 구급대 인력 57명 증원을 통하여 골든타임을 확보 ●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조직 명칭 조정)
조례안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자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 환경 조성과 화학물질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개정에 따른 사무 권한 조정,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청산 및 2014.12.30.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 조정 ⇨ 건축물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에 관한 권한 등 지역 간 통일성을 유지해야 하는 사무는 도로 환원하고 ⇨ 청소년 수련시설 신규건립, 시설확충 및 리모델링 등 현자성이 강한 사무는 시·군으로 위임 ⇨ 유독물영업의 등록·변경등록 등 관련된 사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조정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및 관리권한, 당진항 지원센터 관리 및 사용수익 허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조례안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 2012.12.30. 개정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자치법규(조례) 정비 기준에 맞도록 보완 개정 ⇨ 용어 정의 정비,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여성 비율(40% 이상)과 서면심의 요건 규정, 중복 규정 삭제 등
조례안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도지사	수정 가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4. 9. 25.)에 서 위임한 사항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원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재단의 업무, 기본재산 조성, 재정지원 등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종화 의원 (김응규, 조이환, 정광섭, 신재원, 오인철, 이진환 의원)	원안 가결	● 모든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 공간 및 건축물 등에 범죄발생을 예방하는 디자인을 적용토록 하는 사항을 정함 ⇨ 적용대상, 기본원칙,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수립, 지침 제정 및 홍보, 심의, 추진사업 등 규정

처리 구분	의안 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요 내용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 충청남도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 및 변경되는 기구의 소관 상임위 원회 지정과 명칭변경 반영 ⇨ 재난안전실 신설, 안전자치행정국국의 명칭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 ⇨ 재난안전실 소관을 건설해양소방위원회로 하며, 건설해양소방 위원회 명칭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로 변경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교육감	수정 가결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억원) <table><tr><th>구 분</th><th>추경예산안</th><th>기정예산액</th><th>증 감</th></tr><tr><td>금 액</td><td>29,876</td><td>27,515</td><td>2,361</td></tr></table>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29,876	27,515	2,361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29,876	27,515	2,361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교육감	원안 가결	세입세출 결산액 (단위: 백만원) <table><tr><th>구 분</th><th>예산현액</th><th>결산액</th><th>비고</th></tr><tr><td>세입예산(A)</td><td>2,976,275</td><td>2,999,773</td><td rowspan="2"></td></tr><tr><td>세출예산(B)</td><td>2,976,275</td><td>2,782,349</td></tr></table>	구 분	예산현액	결산액	비고	세입예산(A)	2,976,275	2,999,773		세출예산(B)	2,976,275	2,782,349					
구 분	예산현액	결산액	비고																	
세입예산(A)	2,976,275	2,999,773																		
세출예산(B)	2,976,275	2,782,349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교육감	원안 가결	예비비지출 총괄 (단위: 백만원) <table><tr><th>구 분</th><th>예산액</th><th>지출결정</th><th>지출</th><th>이 월</th><th>집행잔액</th></tr><tr><td>금 액</td><td>7,941</td><td>1,593</td><td>1,486</td><td>0</td><td>107</td></tr></table>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	지출	이 월	집행잔액	금 액	7,941	1,593	1,486	0	107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	지출	이 월	집행잔액															
금 액	7,941	1,593	1,486	0	107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도지사	원안 가결	세입세출 결산액 (단위: 백만원) <table><tr><th>구 분</th><th>세 입</th><th>세 출</th><th>세계잉여금</th></tr><tr><td>계</td><td>5,503,112</td><td>4,979,636</td><td>523,476</td></tr><tr><td>일반회계</td><td>4,687,098</td><td>4,324,615</td><td>362,483</td></tr><tr><td>특별회계</td><td>816,014</td><td>655,021</td><td>160,993</td></tr></table>	구 분	세 입	세 출	세계잉여금	계	5,503,112	4,979,636	523,476	일반회계	4,687,098	4,324,615	362,483	특별회계	816,014	655,021	160,993
구 분	세 입	세 출	세계잉여금																	
계	5,503,112	4,979,636	523,476																	
일반회계	4,687,098	4,324,615	362,483																	
특별회계	816,014	655,021	160,993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도지사	원안 가결	예비비지출 총괄 (단위: 백만원) <table><tr><th>구 분</th><th>예산액</th><th>지출결정</th><th>지출</th><th>이 월</th><th>집행잔액</th></tr><tr><td>금 액</td><td>40,239</td><td>5,512</td><td>5,399</td><td>0</td><td>113</td></tr></table>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	지출	이 월	집행잔액	금 액	40,239	5,512	5,399	0	113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	지출	이 월	집행잔액															
금 액	40,239	5,512	5,399	0	113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도지사	원안 가결	기금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table><tr><th>구 분</th><th>2013연도말 현재액</th><th>2014연도중 증감액</th><th>2014연도말 현재액</th></tr><tr><td>금 액</td><td>217,492</td><td>11,114</td><td>228,606</td></tr></table>	구 분	2013연도말 현재액	2014연도중 증감액	2014연도말 현재액	금 액	217,492	11,114	228,606								
구 분	2013연도말 현재액	2014연도중 증감액	2014연도말 현재액																	
금 액	217,492	11,114	228,606																	

제280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총17건

조례안 14, 결의안 2, 동의안 1
원안가결 14, 수정가결 3

처리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요 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윤지상 의원 (조길행, 유병국, 백낙구, 이기철, 김동욱, 이용호, 홍재표, 조치연, 맹정호 의원)	원안 가결	-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충청남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코자 조례 제정 -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 시책 강구 등 도지사 책무, 지원기준, 사업지원 내용을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신고 활성화 도모 - 공익신고 접수창구 설치, 신고자 보호, 보상금 지급, 위원회 설치, 민간협력 등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가능한 공직자의 대상을 기존 도 소속 공무원에서 시군 소속공무원까지로 범위 확대
조례안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수정 가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위임한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위원회 관할(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 구성(10명 이내), 직무범위, 회의 사항 등 규정

처리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요 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 조례 제명에 두 개의 평가주체(도민평가단과 범도민정책서포터즈)를 반영토록 개정 ● 도민평가단 운영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 ⇒ 도정평가 주체를 “도민평가단”과 “범도민정책서포터즈”로 명확히 함, 도정평가단을 도민평가단으로 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 시중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기금손실 예방 및 수익성 확보 ⇒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인하(2.0%→1.5%) ⇒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 인하(3.0%→2.5%) ⇒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시 매입기준 일부 인하 ⇒ 지역개발채권 발행 근거 명확히 규정 등
조례안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 문제점 개선 ⇒ 조례 제명 변경(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 충청남도에너지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신뢰성, 중립성 확보 방안, 에너지 빈곤층 및 취약지역 지원근거 마련 등
조례안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 「지방재정법」 개정사항 반영 ⇒ 2016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용 의무화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금강종합개발 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 2010년부터 4대강 사업으로 금강준설이 정비완료 됨에 따라 본회계의 세입소멸로 인해 회계 운영 곤란, 금강 유자관리 사업비를 국고에서 충당하는 등 본 조례의 실효성 상실로 폐지
조례안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도지사	수정 가결	●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보호와 향후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 ⇒ 지진피해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임무, 조사시기 등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수정 가결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규정 ⇒ 공청회,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지역개발종합센터 운영, 특별회계 설치 등

처리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요 내용
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 가결	2015년도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변동요인 반영 ⇨ 제2조의 정원 총수 변경(4,098명 → 4,085명, △13)
조례안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 가결	2015.9.1.자 폐지되는 초등학교 1개교 삭제 ⇨ 논산동산초등학교 삭제
조례안	충청남도 교육· 학예에관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 가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 보조금심의위원회 및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보조금 교부대상 변경 ⇨ 보조사업자에 대한 용도의 사용 금지 사항과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등의 감독사항 규정
결의안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철폐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맹정호 의원 (홍성현, 김석곤, 송덕빈, 유익환, 김종문, 서형달, 장기승 의원)	원안 가결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삭제 및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지원 촉구
결의안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 특별위원회 변경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원안 가결	도정 및 교육행정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 ⇨ 명 칭: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 ⇨ 직무범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수시 발생하는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정책사항 점검 및 방안 제시 등"을 "인사혁신 등 교육정책"으로 변경
동의안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도지사	원안 가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도의회 의결 받고자 함

연구 + 토론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6.20~21)

‘교육 1번지 충남’ 되찾기 위한 활동 박차



❖ 20~21일 양일간 연구모임 워크숍 개최, 파트별 모임 주제발표 및 토론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의원)은 충남 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에 대한 사례를 살핀 뒤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했다. 또 무너진 교권회복을 위한 대응책과 참교육의 정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 인지·인성 교육 등을 분야별로 발표, 학교 교육의 현 실태를 점검했다. 또 8~9월 중으로 관련 기관 및 학교 현장 찾아가 큰 틀의 문제점을 분석, 다차원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7.9)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워크숍 개최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시급
❖ 충남만의 독특한 관광 아이디어 구상 필요...요우커 겨냥한 상품 개발
매진 주문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모임은 워크숍을 열고 관광 추세와 변화와 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주제발제에서는 ▲황토 찜질방 체험 ▲녹색 힐링 관광 ▲전통 문화와 먹거리 브랜드화 ▲지역별 스토리텔링 ▲문화 콘텐츠 관광 자원화 등이 제시됐다. 이자리에서 임원들은 의료관광, 화장품 체험 등 활성화를 위해 팜 투어와 관광프로그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산천어 축제와 같은 특색 있는 축제가 계발돼야 하며 백제문화제 행사 시 공주·부여 지역민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시·군 지역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방안 연구모임 (7.15)

도립공원 보전·활성화 위한 현장 활동 돌입



❖ 전북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활성화 사례 살펴보는 등 지역민 의견 청취
❖ 케이볼카, 숙박, 요식업 사업 접목 방안 모색...친환경 개발 수익 창출 목소리 커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방안 연구모임은 15일 전북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과 논산 벌곡면을 찾아 제2차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둔산 도립공원을 찾은 임원들은 도립공원 내 케이볼카 사업 등을 살폈다. 특히 관광개발 활성화 현장을 체험하는 동시에 관광객 취향과 연령대, 주변 숙박, 요식업 등을 점검했다. 또한 벌곡면 지역민을 만나 보존과 친환경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모색했다.

포토의정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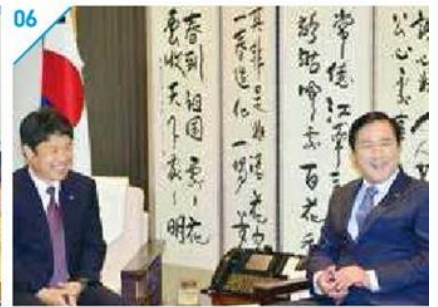


03



02





- 01 6월 3일** 김기영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접견실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충남지역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 02 6월 3일** 김기영 의장 안내로 예산군 게이트볼 연합회 고덕분회 최충진 회장 등 회원일행이 의회청사를 방문하였다.
- 03 6월 4일** 김기영 의장은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와 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개통식에 참석했다.
- 04 6월 9일** 김기영 의장, 유익환 부의장,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김용필 내포문화관광발전지원특위위원장 등은 천안에 위치한 한국기술대학교를 찾아 내포신도시 내 캠퍼스 산실을 논의했다.
- 05 6월 9일** 김기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충청남도 메르스 관리대책 본부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격려했다.
- 06 6월 10일** 김기영 의장은 의정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 박정준 회장을 접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01

01 6월 11일 김용필 의원은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02 6월 15일 김석곤 의원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금산 인삼 홍보맨으로 활약했다.

03 6월 16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홍열)는 도 한해재해대책상황실에서 농작물 가뭄피해 현황 및 대응상황 보고를 듣고, 향후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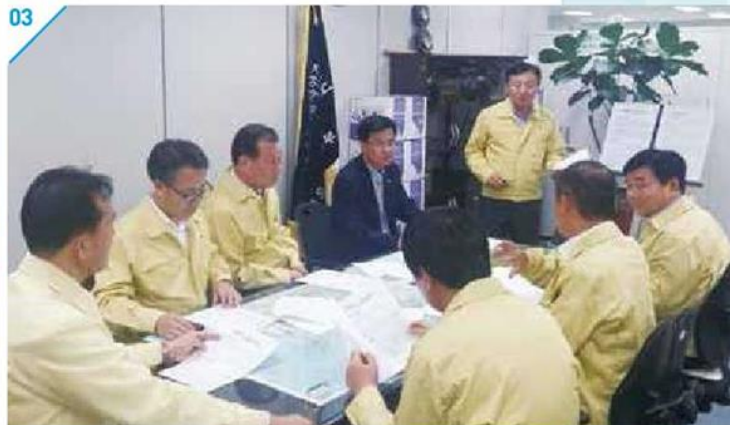
04 6월 17일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오배근)는 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메르스 확산 방지에 앞장서는 직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05 6월 22일 송덕빈 의원은 충남 교총으로부터 감사패 받았다.

06 6월 23일 김기영 의장과 유익환 부의장은 도의회 접견실에서 김택환 도 전문건설협회장을 접견, 장기적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활성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02



03





01 6월 26일 정정희 의원은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전국지역신문협회 제12주년 기념식 및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02 6월 30일 김기영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은 브리핑실에서 제10대 의회 개원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의 의정활동 성과와 이후 계획을 발표했다.

03 7월 2일 충남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좌측부터 유병국, 윤지상, 이공휘, 정정희 의원, 김기영 의장, 김흥열, 신재원, 맹정호, 김종문, 전낙운, 김용필 의원)

04 7월 2일 제10대 충청남도의회 개원 1주년을 기념하여 의정활동 발자취 사진전을 개최했다.



05



05 7월 3일 김기영 의장은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회의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 자치법 전부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 부처에 전달기로 했다.

06 7월 7일 김기영 의장을 비롯한 유익환 부의장,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김용필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장 등은 충남대학교를 찾아 내포신도시 내 캠퍼스 시설을 논의했다.

07 7월 7일 김기영 의장은 점권실에서 궁중요리연구가 한복선, 한복려, 한용규 씨 등 5명과 궁중요리체험관 설립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08 7월 15일 유익환 부의장의 안내로 태안군민들이 도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을 둘러보았다.

06



07



08



NEWS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소식

2015. 08

도의회 온 · 오프라인 활용한 도민 소통 전국 최고

보도 · 사진 자료 수집 활용은 물론 SNS 통한 도민 소통 활발

올해 페이스북 등 SNS 3만 4천명 접속, 보도 · 사진 자료 활용 역시 압도적

충남도의회는 온 · 오프라인(on · offline) 도민 소통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 · 사진 자료 수집 및 활용은 물론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톡을 활용해 도민 목소리를 듣고, 생생한 의정 활동 소식을 전하고 있다.

실제 제10대 의회가 들어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접속한 네티즌은 3만1천408명에 이르

렀고, 블로그의 경우 1만7천여명이 접속하였으며, 1월부터 5월까지 3만4천여명의 네티즌이 충남도의회 각종 온라인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 · 사진자료 제공 및 홈페이지 업로드도, 10대 의회 들어 총 1350여건(보도 483, 사진 819)의 보도자료 및 사진 자료가 업로드됐다. 서울시의회(의원 106명)와 경기도의회(의원 126명)가 각각 1215건, 970건인 점을 고려할 때 충남도의회가 전국 광역 의회 중 압도적으로 높았다.

6. 30 - 제10대 도의회 개원 1주년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지난 1년간 대의기관으로 도민 섬기며 귀 기울였다

김기영 의장, 지난 1년을 마무리하며 기자회견서 소회 밝혀...쉽 틈 없는 의정 활동 빛나

현장에서 도민들과 동고동락, 산재한 현안 실마리 푸는 일등 공신...도민 의정 욕구 충족

김기영 의장은 제10대 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 쉽 틈 없는 의정 활동

지난 1년간 총 9회 135일간(정례회 3회 78일, 임시회 6회 57일) 회기를 운영했다. 이 기간 처리한 안건만 무려 총 131건에 달하며 대부분 도민의 삶과 밀접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에 초점이 맞춰진 조례안이었다.

구체적으로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의원 발의로 처리했다.

‘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

와 5분 정책 발언, 도정·교육행정 질문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며 도민의 대변자로 역할을 충실히 했다.

지난해 11월 14일간 열린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85개 기관을 상대로 총 450건의 정책을 제언하거나 조치를 요구했다. 57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233건은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머지 160건은 제안을 통해 개선을 요청했다.

40명의 '저격수'는 5회에 걸쳐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나서기도 했다. 총 126건의 도내 산적한 현안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였다. 이 현안을 풀기 위해 도의회는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때로는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도의회 본회의장 5분 발언대에서 올려 퍼진 정책 제언은 총 83건. 의원들은 '안면도 국제 관광단지 조성', '화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경개선 분야 투자'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그 결과, 화력발전세 인상 등 지방세 확보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데 일조했다. 이밖에 서면질문 287회 955건, 청원 및 진정 민원처리 32건 등 대의기관으로 현안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 현장의 리트머스

기쁨과 슬픔이 있는 현장에는 언제나 40명의 의원이 함께 호흡하고 있다. 민

생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의기구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평가다. 실제 최근 메르스 사태와 기름 피해와 관련, 의회는 능동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발빠른 현장 의정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 도민 품에 녹아든 것이다.

도의회는 현장 의정을 통해 도내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해 총 6개의 특별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 발전과 문화 역사의 길을 열기 위한 '내포문화권발전특위'부터 유류피해 등으로 침체한 서해안 지역민을 지원할 '서해안살리기특위'까지, 도내 굵직한 현안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 불철주야 현장 의정을 펼치고 있다.

도의회는 더 나아가 정책 대안 제시 및 입법 활동 촉진을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등 5개의 연구모임을 결성했다. 의원들과 해당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문제점을 인식, 워크숍과 현장 방문, 토론회를 거쳐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신발 끈을 조여 맨 상태다.

이밖에 의원들은 지난 1년간 총 14회에 걸쳐 청소년 쉼터 포럼 등 의정토론회를 개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했다. 또 당선·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종료 촉구 건의안

등 9건의 건의·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 위기를 기회로

원 구성 파행부터 천안지역고교평준화를 둘러싼 지역 갈등까지. 의회 내에서도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40명의 의원은 이 문제를 이룬 시일 내 슬기롭게 대처했고, 매듭지었다. 이 매듭은 오히려 의원들 간 더욱 끈끈한 연결고리 역할로 작용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천안고교평준화 조례안 심의 과정만 보더라도 의원들 간 치열한 논의는 도의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이 과정을 통해 고교평준화를 둘러싼 산적한 과제의 매듭을 앞당겨 푸는 계기로 작용했다. 도의회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의원보좌관제와 인사권 독립 등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마련을 꼽았다.

김기영 의장은 "7월은 충남도의회 출범 1주년이자 충남도의 백년대계를 책임져야 할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며 "각종 현안을 착실히 추진해 도민 행복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7월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을 핵심 기치로 내걸었다.

느낌 여행 지금 그리고 여기

9월



공주
부여

백제문화제

9.26~10.4 | 공주시 · 부여군 일원

전국 3대 문화제중 하나인 백제문화제가 공주, 부여 일원에서 "백제 다시 태어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 041-635-6980



보령

무창포 대하, 전어축제

9월~10월 중 |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길 10

가족들과 함께 천수만에서 잡히는 싱싱한 대하와 전어를 맛볼 수 있으며 갯벌에서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무창포축제추진위원회 ☎ 041-936-3510



논산

상월고구마축제

9월 중 |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522

맛도 명품! 건강에도 명품! 땅과 호흡하며 땅의 기운을 그대로 담아갈 수 있다.

상월명품고구마축제추진위원회
☎ 041-746-8673



서천

홍원항 전어 · 꽃게 축제

9월 초~중순 | 서천군 서면 도둔리 홍원항

잃었던 입맛을 되찾게 한다는 전어의 기막힌 맛을 찾아 홍원항으로 맛있는 여행을 떠나보자!

서천종합관광안내소 ☎ 041-952-9525



청양

청양 고추 · 구기자축제

9.4~9.6 |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4길 3-17

7080콘서트, 국악한마당 · 퓨전밴드 공연, 달집 태우기 등 다양한 축제행사가 열린다.

청양고추구기자축제추진위원회
☎ 041-940-2301



홍성

남당리 대하축제

9월 중 |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일원

서해안 일대에서 왕새우 파티가 펼쳐진다. 새우잡이의 제철로 이 기간 만큼은 대하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 041-630-1227



태안

태안 황토바다축제

9~10월 경 |

태안군 안면읍 승연리 꽃지해수욕장

신비의 섬 안면도, 아름다운 꽃지 해수욕장에서 풍부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가 마련된다.

태안군청 문화진흥과 ☎ 041-670-2762

모바일세상 속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에서 충청남도의회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접속방법

- ①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URL 주소
(council.chungnam.go.kr) 입력
- ② 안드로이드 마켓에 “충청남도의회” 검색 후 앱 설치
- ③ PC에서 네이버 검색창에 “충청남도의회” 검색하여
앱 설치(내폰으로 보내기)
- ④ PC버전 홈페이지 하단에 QR코드 스캔



의회 방청 안내

| 방청문의 |

총무담당관실 ☎ 041-635-5054

의회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
참여마당에서 방청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뒤 팩스
(☎041-635-500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청시 유의사항

- 방청석을 이탈하여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장 발언에 대한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
-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등

도민과 양방향 소통을 위한 SNS 운영

- 📄 <http://blog.naver.com/cncouncil>
- 📘 <https://www.facebook.com/cncouncilNP>
- 🐦 <https://mobile.twitter.com/council>
- 📱 카카오톡에서 **Cnc12** 검색 후 소식받기

의회소식지 구독 신청방법

이메일 jungsnk@korea.kr

전화 041-635-5102 팩스 041-635-5009

우편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 구독신청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